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문제 관련 질의·응답자료

2000. 7

이 자료는 일선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간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형식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 일 부

I.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1.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통일문제는 주인공인 우리 겨레의 뜻과 의사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입니다.

- 특히 남북한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의 하나로 합의한 것이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재확인한 사항입니다.

○ 다만, 한반도문제의 성격상,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주는 외세를 배격하는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열린 자주」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분명히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즉, 남북관계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하며
 -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남북연합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과거 북한이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자고 하던 주장이 변화된 것으로서, 우리의 남북연합에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당장 통일은 어렵다”, “과도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이 있는 그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의 연합제안과 공통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중앙정부를 두지만, 이는 독자적 권한(외교권, 군사권)이 없는 상징적 기구로서, 우리의 남북연합에서 상징하고 있는 「정상회의」·「각료회의」 등 남북간 상설적 협의체와 유사하다고 풀이됩니다.

3.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였습니다.
 - 생사 및 주소 확인, 면회소 설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하자고 제의하고, 우선 이번 8.15를 기해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공감함으로써 제3항이 합의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었습니다.
 -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오는 8.15~18까지 남북에서 각기 100명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가족과 친척을 상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상봉면회소의 설치·운영은 이산가족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이번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남북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전인차입니다.
 -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 정부가 그동안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도모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남북간 철도연결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쌍방 정상은 경의선 철도 연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이 모두 원하는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 경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하였습니다.
- 또한 남북간에는 이미 체육·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서울·평양 왕래행사 등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교류의 범위가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
김대중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 이번 남북공동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분단이후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처음으로 직접 서명한 문건으로서, 특히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 김정일 위원장도 자신이 서명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는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되고 분야별 후속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 뿐 아니라 남북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도 협의·해결해 나갈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는 북한의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확인함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답방시기는 앞으로 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II. 주요 관심사항 질의·응답

〈 남북정상회담 관련 〉

1.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관련, 우리측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면합의는 없는가?

○ 아무런 이면합의도 없습니다.

- 우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 국제정세, 북한의 내부사정, 남북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선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북한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개선 등 변화가 불가피하고,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며

-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와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결과 북한이 우리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2.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쌍방 정상간에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총 11시간 동안 직접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남북간에는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쌍방 통일방안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는 앞으로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큰 길을 열어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또 다른 큰 성과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쌍방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 특히 합의의 재생산보다는 합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 이는 사실 합의가 용이치 않았던 문제 중의 하나였으나, 남북정상회담이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계속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3.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나?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긴장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정일 위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이것이 북한의 미·일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 앞으로 개최될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등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협의,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4.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영접 나올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몰랐다면 허술하게 대비한 것은 아닌가?

-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비는 했지만, 미리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 등의 이유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 특히 의전절차 등 협의과정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 주지 않아서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는 사전에 남북간에 합의한 체류일정안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였으며
 - 특히 대통령의 서울 출발시부터 사전에 준비한 비상사태 대비계획에 따라 유무선 비상통신망의 점검 등 만일의 가능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주도했고, 우리가 여기에 끌려 다녔다는 주장이 있는데...

-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가 평양이기 때문에 외견상 북한 주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역으로 누가 상대편 지역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추구해 왔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
 -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도 그 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도 이미지 개선 등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우리가 목표하던 성과들을 이룬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공동선언 내용 관련 >

1. 북한이 공동선언 제1항의 「자주」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나 국제공조 폐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나?

- 공동선언 제1항과 주한미군 및 국제공조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 주한미군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간에 협의·결정할 문제로서
 - 현재 우리와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으며, 그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공조는 북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 이기는(win-win)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즉,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협조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중·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도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공동선언 제2항은 누가 누구의 방안을 수용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통일방안은 어떤 것인가?

- 이번 남북 공동선언 제②항은 남북간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접점은 당장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으며,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 점에서 과거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자고 하던 북한의 주장이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남북연합에 접근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하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제기하였던 「3단계 통일방안」도 우선 남북연합을 형성한 다음, 단계적으로 완전한 통일국가(연방정부→단일정부)를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북한이 비전향장기수는 송환하는데, 우리의 국군포로나 남북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군포로문제와 남북자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다만 직접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범주에 넣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
- 지난 6월말 개최된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에 합의하면서
 - 우리측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와 남북자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번 합의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또 앞으로 상봉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남북자문제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범주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남북경제협력은 결국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지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상호주의는 포기한 것인가?

- 남북간 경제협력은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 그리고 남북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남북 중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 북한의 경제현대화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일입니다.
 - 정부로서는 외국정부나 기업, 또는 국제기구의 협력기금이 유입된다면 북한의 경제현대화에는 물론, 우리기업들의 대북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지원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조건없이, 민간차원의 경험은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당국간 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다만, 남북간 국력의 격차,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 정상회담후 주요 현안관련 >

1.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신드롬 등 북한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함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구현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 그 동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반자」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그 동안 냉전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내 일부 대북관이 한쪽으로 경도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이중적인 면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북한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고정시켜 놓고 보기보다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은 변화했는지? 변했다면 무엇이 변했는지?

- 아직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선 '자주'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배타적 자세를 고집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또한 과거 고려연방제를 고수하지 않고, 평화공존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남북연합에 접근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문제 해결문제를 이행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먼저 제의하고, 전향적인 합의서안을 제시하는 등 정상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대남 비방중상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는 과거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한 바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그러나 아직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거나,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의 안보태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더욱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 북측의 우리측 특정언론 취재거부나 야당총재 비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특정 언론사의 보도경향 또는 논조를 문제 삼아 취재에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특히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현실적으로 우리 언론의 수준과 특성을 볼 때 그 같은 일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또한 야당 총재 등 우리측 특정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고, 확대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면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북한이 우리 체제의 특성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갖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 이런 점에서 8월중으로 예정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나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 우리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
이나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나 최고
당국자에 대한 예우 등을 지켜야 합니다.
 - 특히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사회의 통
념을 존중해야 하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 또는 캐릭터의 임의적인 사용은 북
한측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북한측이 그들 최고당국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
일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누가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북한 국기(인공기)의 경우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
적 상징성으로 인해,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5. 대북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른바 남남갈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사람마다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더욱이 우리는 동족상잔 등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대북문제에 있어 이른바 보수와 진보적인 성향 사이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그 동안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갈등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 최근의 이른바 남남갈등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협력 단계로 진입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부른 낙관이나 비관도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는 것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객관적인 대북인식의 확산 및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차이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